



트럼프發 對中 규제… 세계 AI반도체 지각변동 신호탄

美, 수출관리규정 개정 발표

韓 등 18개국 '1등급', 규제 제외
中·러시아 등 22개국 3등급 지정
첨단 AI 반도체 칩·모델 원천차단
장기적 기술 자립 가속화 전망도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호국가에는 AI 반도체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주요 적성국은 접근을 차단해 기술 개발에 차질을 주려는 목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12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다.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AR는 전세계 국가를 첨단 AI 반도체 접근 가능 범주에 따라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1등급 국가 18개국에 속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등급 국가는 총 120여 개 국가로,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 3등급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2개국은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무기 금수국은 허가신청을 해도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

받는다.

미국 정부가 이번 EAR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국가안보적 관점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중국 등이 첨단 AI 반도체 칩과 모델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대부분 규제에서 면제되는 만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한국 소재 기업이라도 3등급 국가에 본사가 위치했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예상 영향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 등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본사가 한국에 있는 만큼 당장의 큰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EAR가 AI 반도체 수출입 여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에까지 등급에 상관 없이 비중제한을 두고, 첨단 AI 모델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1등급 국가는 해당 수출 통제에서 면제되지만 2등급 국가에는 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잠재적 시장인 중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된 만큼 향후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 수요를 일부 소실하는 문제와 함께 중국의 기술 자립이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4분여 만에 끝났다. <관련기사 6면>

/뉴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을 사면초가 상태로 밀어넣음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HBM3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美 자국 우선주의 확산…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트럼프, 200억 달러 투자 계획
“8개 주에 데이터센터 들어설 것”
MS 등 빅테크도 투자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주요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섰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20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투자로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리조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8개 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주체는 아랍에미리트(UAE) 억만장자 후세인 사즈와니로,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DAMAC)의 창립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즈와니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사즈와니는 트럼프 조직에 수백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800억 달러(약 117조 7600억 원)를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글은 같은 기간 330억 달러(약 48조 1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구글은 같은 기간 330억 달러(약 48조 1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조 1536억 원)를, 메타는 270억 달러(약 39조 4000억 원), 아마존은 190억 달러(약 27조 7200억 원)를 각각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위해 미국 전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영컨설팅사 맥킨지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오는 2030년 까지 2500억 달러(약 35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계, 전기 시스템 조달과 설치 비용만을 고려한 수치로, 실제 투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북풍 준비·계획 절대 없어 외환 용어는 軍 무시하는 것”

내란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야당, 내란·외환 혐의 특검 발의
군 장성 직책 걸고 사전인지 부인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혁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강호필 지자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

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 사령부(지자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崔 대행, 日 외무대신 접견… “엄중한 국제정세
에도 흔들림 없이 협력”
사진/뉴시스
▲외교부 “생포 북한군 귀순 표명 없어… 요청땐
우크라와 협의”

▲홍준표 “트럼프 취임식 참석, 일정 조율 중”…
권성동·한동훈 불참
▲윤 탄핵심판 공방… 국회 측 “신속한 파면만이
답” vs 尹 측 “재판 공정성 의심”

▲국힘, ‘카톡 검열’ 전용기 제명 촉구안 제출…
“국민 기본권 침해”
▲민주 “김건희 황제 소환 이어 윤석열 황제 조사
꿈꾸나”